



한미FTA  
반대 투쟁 잠정  
평가와 전망

▶ 3 면

연말 특집 - 올해 10대 이슈  
혁명과 반란의  
2011년

▶ 8~9 면

경제 위기  
유로존은  
해체될 것인가?

▶ 6, 7 면

'점거하라'의 역사  
1930년대 미국  
민중 투쟁

▶ 10 면

학생운동  
대학 총학생회  
선거 평가

▶ 13 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주)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1

Left21.com

제71호 | 2011년 12월 17일 ~ 12월 30일 | 값 1,800원

레프트21



산산조각 나는

이명박 정권

진보의 대안과 투쟁을 건설하자

>> 관련기사 4, 5면

한미FTA 날치기 이후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한 나라당 해체'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스스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디도스 사건이 결정타이기 했지만 이미 해체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심화 상황이 집권당 위기의 바탕이다. 지배자들의 위기 의식과 고통전이 필요성은 더 커지는 데, 대중은 고달픈 삶을 참지 못해 분노와 요구를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지배자들의 요구에 충실하며 대중의 요구를 짓밟은 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오세훈, 나경원

이 이미 퇴출됐고, 이제 이 1퍼센트 정치인들의 서식처인 한나라당 자체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날치기는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반이명박 여론은 더 악화됐고, 거리의 저항은 확대됐다. 사법부의 일부마저 공개적 항명에 나섰고,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력 상실 속에 디도스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통치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중분해됐다.

게다가 이제 검찰의 칼끝까지 이명박 쪽을 향하고 있다. '상왕' 이상득의 보좌관이 7억 원을 받은 혐

의로 구속됐고, 이명박의 사촌처남은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왕자관' 박영준도 구속될 듯하다. 이명박은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두고 벌써 '산 송장'이 되고 있다.

이제 박근혜가 총대를 메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박근혜는 흠탕물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할 속셈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말기적 위기가 박근혜를 무대로 끌어냈다.

이제 박근혜가 총대를 메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박근혜는 흠탕물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할 속셈이었다. 그런데 한나

라당의 말기적 위기가 박근혜를 무대로 끌어냈다.

사실 그동안 '여당 내 야당'의 이미지로 반이명박 반사이익을 누려 온 박근혜에게 한나라당 선장 자리는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난파선의 선장실이 아니라 언저리에 파해 있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 박근혜는 한나라당호의 선원과 외양을 바꾸고 색을 다시 칠해 침몰을 막아보려 한다. 그래서 박근혜의 '쇄신'안은 친이계의 완전한 항복과 이명박의 탈당까지 포함한 것일 수 있다.

>> 4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누구의말일까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욕먹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안 쓴다.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패스다.”

현실도피 증상을 보이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

“미친 X들 아니냐. 그런 거액을 나한테 확인도 없이 하나.”  
이상득, 보좌관이  
자기도 모르게 7억을 받았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박근혜가 친박조직 송년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

“내 이름을 박만섭, 김만섭으로  
바꿨다고 이만섭이 달라집니까?”  
전 국회의장 이만섭,  
한나라당 재창당에 대해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박근혜가 아  
니라 박정희가 나와도 안 됩니다.”  
원희룡

“이젠 가슴 두근대며 신문 보지 않  
아도 된다.”  
홍준표, 대표직을 물러난 다음 날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 자로 바뀌  
말하면 ‘난투극’, 네 자로 하면 ‘아  
수라장’이었습니다.”  
MBC뉴스

“살아온 삶의 모습이 모여 나를 만  
든다. 성질 많이 낸 사람, 눈이 약  
간 찢어지면서 독사같이 생긴다.  
꼭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명진스님

“뻥속까지 친미(親美)라니 국산  
쥐는 아닌 듯”  
명진 스님, 주어는?

“비서만 잡아가는구나. 과속하면  
내비게이션 잡아가겠구나.”  
한 네티즌, 디도스 공격을 최구식  
의 비서 단독 범행을 몰자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디도스]  
범행을 저지르고 거짓말하려는  
것일 수도”  
역시 뛰어난 <조선일보>의 상상력

“(샤넬) 백값 보내도!”  
벤츠 검사가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12월 30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널드 앞  
홍대입구역 3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물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  
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  
차공장 앞)

##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냉혹한 자본가이고 부패한 정치가였던 박태준의 죽음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공항철도 노동자들 다섯 명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침 이, 반올림) 활동가이자 노무사인 이종란 씨가 6년 전 철도공사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사고로 죽은 친구를 떠올리며, 이윤 논리만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철도 이용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글을 보내왔다.

12월 9일 인천 공항철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6년 전에 내 친구에게도 일어난 바 있다.  
오진균. 이 녀석과 나는 20대에 항상 같

이 다니고 이상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둘도 없는 친구였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노무사 시험 합격했을 때, 이 친구는 민망하게도 학교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가 되라고.

그 녀석이 요즘 몹시 괴롭게 떠오른다. 진균이는 2005년에 철도공사에 수송원으로 들어갔다가, 선로 입환 작업 중 열차에 치어 몸이 반토막이 나고 살점이 갈갈이 찢겨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소식이 한줄 뉴스로 나왔다. “조치원 역사 작업인부 1명 열차사고로 숨져.” 이게 그 녀석의 마지막을 장식한 기사였다.

나는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철도노조 분들을 찾았었다.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 분들은 그런 사고는 너무 흔하고, 맨날 장례식 쫓아다니는 게 일이라고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모자라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천천히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 타고 뛰어내려 작업을 한 뒤 다시 뛰어오르는 (비승비강) 작업까지 한다고 했다.

진균이는 몸치였는데, 들어간 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것도 새벽 2시에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는 인력도 없이 말이다.

결국 진균이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미처 달리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 안으로 빨려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또 일어난 것이다. 6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아니, 철도공사 측은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더 줄였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꿨다. 그 위험한 일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내맡기고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

업하게 했다.

인천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죽음은 완전한 인재다. 이것을 그냥 열차 운전사의 잘못으로, 혹은 돌아가신 분들의 안전 부주의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윤 논리만을 생각하는 이 위험천만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번엔 또 다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들이 희생될 수 있다.

6년 전 진균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철도공사 측은 향해 팻말이라도 하나 더 들었더라면, 당시 벌어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싸움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냈더라면, 오늘 이 다섯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스런 마음이 든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레프트21> 판매자 재판 2심 최후진술

## “우리는 체제와 정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 인근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후, 대책위를 구성하고 1년 반 넘게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검찰은 신문 판매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켜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6인은 좌파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웠고, 이 투쟁은 국내외 진보 인사들 등 광범한 지지를 끌어냈다. 결국 법원은 올해 7월 28일 1심 선고에서 5명에게 무죄를, 1명에게만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그런데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12월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6인은 판사가 진술을 제지하는 데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최후진술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최후진술문들을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지태

## “99퍼센트를 대변하는 신문 판매는 정당합니다”

검찰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레프트21>의 정부 비판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주장이 가짜이나 불만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도록 용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쟁점은 ‘정부 비판적 신문의 거리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에 반대해 99퍼센트를 대변하는 신문을 판매한 일이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또 섹검, 띄엄에 이어 벤츠 검사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이 과연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공포’를 계속할 것입니다.

김형환

## “우리 모두는 무죄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레프트21>의 급진적 주



7월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를 거둔 뒤, 6인이 서울지법 마당에서 방청을 온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장이 유통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리를 연행하며 “사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1심 때 검사도 <레프트21>의 주장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G20 정상회담 당시 서초경찰서도 G20에 비판적인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불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 통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레프트21>은 노동자·서민의 관점을 대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을 받지 않고, 직접 독자에게 판매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독자와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정 법원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저를 비롯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신명희

## “우리는 이미 이명박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고를 무시한 이 정부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와 디도스 공격은 이명박 정부 자신이 민주주의 파괴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리 6인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문주

##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

다수 대중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레프트21>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김득영

##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체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할 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을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대중의 염원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랍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아랍의 불길은 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레프트21>은 끔찍하고 야만적인 체제의 본질을 들춰내는 좌파 언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저는 그 신문을 계속 판매할 것입니다.

조익진

## “99퍼센트의 저항과 진실을 알릴 것”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 감세를 강요했고 높은 물가와 실업을 감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나아진 것은 부자들의 주머니 사정뿐입니다.

그래서 99퍼센트의 저항의 외침은 한국 민중의 가슴에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약자들의 진실’입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리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함께 갑시다! 선고 재판

12월 30일(금)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422호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 한미FTA 날치기 무효! 디도스 테러 한나라당 해체! 범국민 촛불 대회

12월 17일(토) 오후 4시 서울 도심  
12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 도심  
12월 31일(토) 시간 장소 추후 공지  
주최: 한미FTA저지 범국민  
※ 지역별 집회도 열립니다.

## 2011 세계 이주민의 날 “우리의 목소리”

12월 18일(일) 오후 2시 보신각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공동체들

##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1차 포위의 날

12월 23일(금)~24일(토)  
주최: 쌍용차노조



# 한미FTA 반대 투쟁 — 잠정 평가와 전망

12월 10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이어진 집회와 강력한 거리 행진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처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에도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펼쳐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드물었다.

모두들 한미FTA 비준안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봤다. 미국 의회에서 이미 비준안이 통과된 상황인 데다, 민주당도 '미국이 비준하면'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대 운동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을 추수해 오면서 비준안 저지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0·26 재보선이 우파의 정치적 패배로 끝나면서 사람들의 투지를 고무했다. 9월 말에 시작된 미국의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도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급진화를 더욱 자극했다.

재보선 직후부터 한미FTA 반대 촛불 시위가 급격히 커진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10월 말부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2008년 촛불을 떠올렸다.

이제 한나라당은 감히 비준안을 강행 처리 못하고 주저했고, 민주당도 더 강력하게 비준안을 반대하는 시늉을 했다. 비준안 처리 시도는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도 나서서 돌격 명령을 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한미FTA 반대 투쟁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열렸고,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5만여 명이 결집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미FTA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오래 전부터 합심해서 추진해 온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었고 세계경제 위기 격화 속에서 한미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도 절실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척했지만, '알면서도 안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날치기는 즉각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낙담하기보다 "비준무효 명백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은 물대포와 원천봉쇄로 촛불을 끄려고 했지만,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지 FTA 날치기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불만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은 이미 많은 파장과 성과를 낳았다.

우선, 국가기구 내에서도 한미FTA를



12월 10일 한미FTA 날치기 무효 촛불 문화제 촉진 등의 성과를 낳았다.

10·26 재보선 이후 급격히 성장한 거리의 투쟁은 이미 지배자들의 분열과 이명박의 레임덕 심화

놓고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한미FTA 재검토 청원 연서명까지 벌였다.

비준이 늦어진 결과, 한미FTA 발효도 늦어지게 됐다. 미국의 꼼꼼한 재검토 때문에 발효가 2~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날치기와 후폭풍

날치기 이후 '쇄신'을 통해 물타기를 하려던 한나라당의 계획도 파산하고 있다. 특히 디도스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침몰하는 배가 됐고, 새 선장이 된 박근혜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쥐새끼 같은 움직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저항의 확대가 지배자들의 분열과 이명박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한미FTA 반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건설해 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이 여기에 큰 기여를 했다.

물론 이 운동은 2008년 촛불항쟁의 규모처럼 확대되면서 일반화된 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 시도 이후에는 다소 기세가 꺾이는 조짐도 있다. 이처럼 운동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은 것에는 몇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 한미FTA 반대 운동에 가장 늦게, 그것도 불철저하고 모순된 태도로 뛰어들어 민주당이 시종일관 김을 빼는 구실을 했다. 애당초 한미FTA를 체결한 장본인 민주당은 반대 운동에 참여해 '재협

상'이라는 요구를 들이밀었다. '이명박의 FTA는 나쁘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FTA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 'FTA 자체를 폐기하지 말고 일부 독소만 빼자'는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민주당의 한계를 약한 고리로 이용해 거둬 운동 진영의 정당성과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고, 결국 날치기를 강행했다. 날치기 이후 거리로 나왔던 민주당은 겨우 3주 만에 국회 등원을 결정하며 거리의 저항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이 민주당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왔다면 이것은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당에 의존해 한미FTA를 막으려 했다. 이것이 운동 확대를 가로막은 둘째 요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의 일부 지도자들은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 수준으로 제한했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머뭇거리거나, 독립적인 행동을 주저했다. 주요 결정들이 민주당의 뒤를 쫓아 내려지면서 기층의 운동 건설은 그것에 종속됐다.

셋째, 조직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높았다면 이런 약점들이 극복될 수도 있었다. 조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이윤 체제를 타격하고 한미FTA 비준과 발효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급속노조가 한미FTA에 맞서 파업까지 벌인 2006년과는 다르다. 정

부도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늘어서 노동자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거짓말과 주간연속2교대 등 기반적 양보 시늉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 어떤 정치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중의 급진화 수준은 민주당을 넘어서고 있지만, 안철수·박원순 등의 온정적 개혁주의 정도에 이르러 있다. 또 자신감을 높여가고 있지만 '어차피 이명박 정부는 곧 끝나고,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수동적 기대도 있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수동성을 부추기며,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동맹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은 "2008년의 촛불은 거리의 저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시켰다"며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통한 비준무효-재협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2008년 촛불에서 문제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거리의 저항을 노동자 파업과 연결시키며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에 있었다. '제도권에서 정치적 해결'을 말하며 투쟁을 가라앉힌 것이다. "문제는 정치"이지만, 어떤 정치냐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과연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을 심판하고 민주당과 진노세력들이 권력을 되찾는다고 해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야유, 거리 투쟁의 지속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는 끝까지 거리의 저항에 함께 하면서 진정한 정치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 심화와 한미FTA 발효 연기 등이 가져 올 기회를 대중투쟁 건설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한미FTA가 진정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들과는 사실을 알리며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협소한 산업별, 부문별 시야에 갇혀 있지 말고 전체 피억압 민중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넋놓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추수해서도 안 되겠지만, 개혁주의적 대중 속에서 함께 운동을 건설할 기회를 종파적으로 거부해서도 안 된다.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는 잊고 거리의 투쟁만이 대안이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거리의 투쟁과 선거 대응은 대립될 필요가 없고, 거리의 저항이 커지며 대중의 자신감을 높일수록 선거에서도 우파를 패배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만 낙선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을 묵인·방조한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반제국주의 등에 대한 태도도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기성 정당과 후보를 낙선시키는 운동만이 아니라 진보정당들과 그 후보에 대한 지지라는 대안도 필요하다.

한미FTA 반대 투쟁이라는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그것이 낳은 급진화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장호중·전지윤

## 노동자들 속에서 투쟁 건설의 과제

한미FTA 폐기 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나서야 한다. 물론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의 레임덕이 깊어지고 한나라당은 분열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산별·연맹 대의원대회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이나 그 소속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투쟁 건설 계획들을 제출하고 결의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동시에 좌파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왜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조리있게 설득하며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이

통과된다면 이런 일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좌파 단체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공동 대응을 한다면 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좌파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운동이라는 이유로 이 운동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고 운동 내에서 좌파적 대안이 채택되도록 개입해야 한다.

최영준



일투전



한나라당 해체 위기

# 난파하면서 쥐떼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한나라당

김문성·전지윤

▶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친이계는 박근혜를 총 알받이로 여기지 전권을 줄 생각이 없다. 그동안 박근혜와 공조했던 채신파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미 수도권 젊은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뒤로 줄서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공중분해는 끝나지 않았고 분당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난파선을 뛰쳐나가는 쥐가 생겨났다.

## 플랜 B

무엇보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1퍼센트의 부패한 친미·우파 특권층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의 뿌리는 가려질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의 이명박과 '거리 두기'는 성공하기 힘들다. 정치적·계급적 기반이 이명박과 똑같은 박근혜는 이미 FTA 날치기에 앞장섰다. 어설픈 '거리 두기'는 산토끼를 잡는 효과보다는 집토끼들 사이에서 분란의 씨앗만 만들 것이다.

12월 13일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전경련이 불참한 것은, 이제 재벌들도 대놓고 이명박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제 지배계급도 "플랜 B"인 민주당을 통해 들끓는 대중의 분노를 달래고 정치 위기를 봉합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의 위기가 낳은 기회를 영용한 인물과 세력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독자적 대안 제시와 투쟁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반MB'로 돌진할 것이고, 친이계는 박근혜로는 안 된다며 또다른 분열을 모색할 것이다.

## 디도스 테러의 진실은?

경찰은 디도스 테러가 27살 9급 수행비서 공모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술을 마시다가 결심해서 곳곳이 혼자 범행'했고, '조사중에 화장실 가다 공범과 마주치자 갑자기 자백'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원희룡조차 "나도 [이 조사 결과] 안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건달 출신 일개 비서가 범행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왜 그는 범행 시간에 국회의장 박희태의 비서와 다섯 차례 통화했을까? 왜 경찰은 범행 직전 술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것을 숨겼을까? 경찰은 왜 거액의 돈거래를 알고도 숨겼을까? 왜 선관위와 국정원은 사이버 공격을 몇 시간 동안 방관했을까? 왜 당시 선

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검색 기능만 마비됐을까? 왜 선관위는 친아당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를 대거 교체했을까?

이 때문에 선관위 내부 공모설, 청와대 연루설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범행의 핵심 목적은 출퇴근대 젊은 노동자층의 투표율을 낮추는데 있었다. 그리고 젊은층의 투표율을 낮추

## 결레 뺀다고 수건 되나?

한나라당은 '부도 후 위장폐업을 하고 간판을 바꿔 달아 신장개업을 해 온 전력이 화려하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군부독재를 뒷받침했던 민정당에 있다.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은 나중에 김영삼과 손을 잡으며 민자당(민주자유당)으로 신장개업했다. 1987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강력한 노동자·학생 투쟁 때문에 탈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러다 1995년 지방선거 참패 후 위기가 오자 이번에는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그러나 이것이 벌여 준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는 노동자 총파업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다.

결국 신한국당은 1997년 대선 직전 다시 '꼬마 민주당'과 합쳐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그렇지만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정권을 잃었다. 그만큼 위기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 경제 위기가 국내 정치 위기와 겹쳐있다.

우파들은 2004년에 '차떼기' 위기를 천막당사 속에서 버텼던 것을 떠올릴 것이다. 당시 노무현 탄핵 후폭풍 속에서 박근혜는 천막당사에서 일하는 쇼를 했다. 그것이 그나마 총선에서 더 큰 패배를 막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집권 6년이 만들어낸 실망을 이용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레임덕에 빠진 집권 여당이고,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는 더 심각하다.

# 통합 민주당의 난장판 속 출발이 보여 준 것

최미진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 등과의 통합을 결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난장판을 연출하고 말았다. 액젓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서로 뒤엎기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심지어 한 남성당원은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통합반대파들이 집단 퇴장해 투표 참가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간신히 통합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런 추잡한 '씻김극'을 거쳤음에도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통합반대파는 전당대회 결정에 불복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통합의 주도권과 지분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지저분한 싸움 때문에, 통합의 '감동'과 '시너지' 효과는커녕 민주당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단지 전당대회 활극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계는 최근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2008년 촛불시위때처럼 이번에도 막차 타고 왔다가 첫차 타고 떠나고 있다. 등원을 합의한 김진표만 욕먹을 일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압도 다수가 등원을 바라는 분위기에서 김진표는 재신임까지 받았다.



8년 만에 '난닝구'가 등장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당에 고쳐 쓸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민주당은 디도스 사태로 한나라당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이 판국에 등원해 산소호흡기를 달아 주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을 더 밀어붙이고 이명박 정권

을 궁지로 몰아넣어야 할 절호의 기회에 말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 투쟁을 고무하는 게 "제야당으로[서] 책임"(김진표)과 어긋난다고

## 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등으로 진보적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왔다.

하지만 근래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오세훈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용

적률 상향조정을 허용했다. 이런 식의 재건축 확대는 강남 재건축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치솟게 할 것이고 건설재벌의 배만 볼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박 시장에 호의적이었던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

규직화'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에 간접 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기대했던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지도 미뤄지고 있다. 박 시장이 조중동 종편 개국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도 부적절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복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삽질 예산을 부활시키려 하는 상황이 박 시장의 행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을 비판하고 진보적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며 기층의 압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는 것은 당시 한나라당과 나경원 캠프 '더러운 선거 전략'의 핵심이었다. 공모씨는 나경원 캠프의 홍보 책임을 맡고 있던 최구식의 비서다.

이제 이 모든 의혹을 넘겨 받은 검찰은 과연 다시 한 번 이명박의 구원투수 구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죽여가는 권력의 뒤통수를 칠 것인가.



# 모순을 품은 채 출범하는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전지윤

한나라당이 말기적 위기를 겪고 있고 민주당도 지리멸렬한 현 정치 상황이 통합진보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은 한미FTA 투쟁 속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보다 훨씬 일관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7백여 명이 집단 입당하는 등 새롭게 급진화하는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정희, 김선동, 강기갑이 “폭력 3인방”이라며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합 과정에서 이 당의 지도자들이 보인 비민주적 행태와 이데올로기적 후퇴만 보고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며 등 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층 지지자가 아니라 상층 지도부만 보는 오류다. 또한 이데올로기만 보고, 그 당의 실천,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이 당은 여전히 노조 상근간부층을 고리로 노동계급과 연결돼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 진보정당이다. 그래서 한미FTA 투쟁에서도 자본가당인 민주당과 다른 태도를 보였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등원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공동대표는 같은 시기에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덕담”을 건넸다. 뿐만 아니라 유시민은 “강령에 기업정책이 담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진보정치> 인터뷰). 참여당 강령에 있던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통합당 강령에서 빠진 게 아쉬운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천호선 대변인도 “노동자 계급 구성이 변했으므로 노동자 중심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의 노동계급 기반과 성격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룡전자의 투사들이 반발하며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 빠짐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민주노동당, 통합연대)과 자유주의 세력이 결합한 인민전선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상이한 계급에 기반한 세력들이



12월 11일 통합진보당 출범식에 참가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상이한 계급에 기반한 이 당은 창당 초기부터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당 형태로 만든 인민전선체로서 모순이 불거지는 것이다.

창당 초기입에도 이 모순은 벌써 여러 차례 드러나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과정도 그랬다. 참여당 쪽은 “노동이란 단어로 재뿌리지 마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천호선은 민주노동당 쪽에서 ‘노동’이 들어간 당명 후보를 제시한 것을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노화찬 대변인 선임 과정에서 세력간 불협화음이 노출돼 “초반부터 빠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장은 이런 불협화음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듯하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진보의 몫을 늘리기 위해 모순을 덮어두자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용주의가 먹히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지도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묘에 이어서 두 정권 때 죽어간 노동자의 묘를 참배하는 역설적 상황도 펼쳐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높아지고, 통합진보당의 인민전선적 성격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수록 모순이 갈등으로 분출할 가능성은 커진다. 갈등이 어떤 식의 균열을 낳을지는 구체적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

럴 때, 좌파는 그것을 진보의 원칙을 다시 세우며 계급투쟁을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 타이밍을 붙잡으려면 좌파는 통합진보당의 안팎에서 개입·주장하며 협력적인 투쟁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당의 노동계급 기반과 접촉할 수 있고, 이 당의 모순이 크게 불거질 때를 이용해 좌파의 더 큰 세력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배타적 지지 방침’의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가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이른바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쟁은 내년 1월 말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를 전후해서 더 뜨거워질 것이다.

애초에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을 취한 것은 ‘더는 기성 자본가 정당들에 의탁하지 않고 독자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이었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항의 총파업과 IMF 고통전기라는 경험 속에서 노동계급 의식의 발전이 낳은 역사적 진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지지 폐기를 촉구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그동안 배타적 지지가 끼친 폐해는 엄청나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

서 이미 배타적 지지 방침은 모순에 빠졌다. 엄연히 진보신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가 온전히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만약, 올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이 성사됐다면 이 어려움은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으로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진보신당 독자파가 그것을 빌미로 통합을 거부하면서 진보대통합은 실패했다.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지적처럼 “배타적 지지 방침은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린 상황”이 돼 버렸다. 이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누구보다 진보대통합을 망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에게 있다.

물론 정의현 수석부위원장의 지적처럼, 이

상황에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정치적 대안을 그냥 노동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집단적 정치방침이 필요하다.

특히 결코 노동계급을 대변할 리 없는 한나라당, 민주당 같은 기성 자본가 정당에 대한 ‘배타성’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 노동운동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 등을 기웃거리는 상황에서 더더욱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에 승계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맞지 않다. 특히 충분한 민주적 토론도 없이 다수파가 패권적으로 이런 방침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듭 강조해 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방침

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해진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침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교육지책이다.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특정 진보정당만을 지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율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노동자들의 결속을 해칠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과 폭로에만 머물지 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적 실천과 입증 속에서 지지를 넓혀 나가려고 해야 한다.

##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서평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는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날치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경찰의 탄압을 뚫고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거리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2008년 촛불항쟁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운동의 자신감과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친다.

2008년 촛불항쟁은 1백만 촛불의 힘으로 임기 초반 이명박의 개악 드라이브에 부분적 제동을 건 투쟁이었다. 무엇보다 이명박의 당선과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로 낙담하던 사람들에게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경험과 가능성을 보여 줬다.

동시에 촛불항쟁의 궤적은 우리에게 다음번 투쟁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던져 준다.

그런 점에서 촛불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김광일 지음 | 책갈피 | 272쪽 | 1만 원

인 김광일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이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는 한미FTA 저지 운동 참여자들이 꼭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촛불항쟁 한복판에서 활약했던 저자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이 운동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교훈을 제시한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지금 한미FTA 저지 운동의 상황에 비춰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교훈들을 추려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운동에서 개혁주의의 문제가 있다. 2008년 촛불항쟁 초반에 NGO, 진보정당 등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운동이 성장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

그러나 주요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촛불항쟁이 절정에 오른 순간에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는 대신 거리 시위를 진정시켜 제도권(의회)으로 수렴시키려 애썼다.

개혁주의는 ‘중립적 기구인 의회를 통해 위로부터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국면에

서 운동의 결림돌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과의 의회 안 동맹에 집착하면서 민주당의 보수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민주당은, 2008년 촛불항쟁과 마찬가지로, 가장 늦게 거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떠나려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독자적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중요하다.

2008년 촛불항쟁의 참가자 다수는 미조직 청년들이었는데, 조직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이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해 운동이 계속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한미FTA 반대 투쟁에 노동계급의 산업 투쟁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이 처한 과제들을 풀어 내

운동을 발전시키려면, 혁명가들에게도 과제가 있다.

2008년 5월 말 촛불항쟁이 장관 고시를 앞두고 고비를 맞았을 때, 다함께는 기꺼이 ‘총대를 메고’ 5월 26일~28일 거리 행진에 앞장섰다. 이때 거리행진이 성공한 것은 촛불항쟁이 이후에 6월 10일 1백만 촛불행진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즉 혁명가들은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운동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투쟁 부위로서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 속에서 변혁적 대안의 올바름을 대중에게 입증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그런 과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의 저자가 수배 해제돼서 다시 자유롭게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김영익





# 유로존은 해체될 것인가?

제인 하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유로존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 상황은 판돈이 매우 크다.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국내총생산이 14조 달러고 인구가 4억 9천만 명인 세계 최대 경제대. 또, 17개 국가로 구성된 유로존에는 유럽연합에서 경제가 가장 큰 네 나라 중 세 나라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가 있다.

2010년 그리스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투입된 덕분에 유로존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의 제2막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유럽 지배자들이 유로화를 구하려 애쓰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도 지키려 하면서 정치적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그리스에서 유로존에서 셋째로 큰 경제인 이탈리아로 전염됐다. 이탈리아에 필요한 구제금융 액수는 무려 6천5백억 유로에 이른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국내총생산의 16.8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스는 고작 2.3퍼센트인데 말이다.

총파업과 시위 등 전례 없는 항의 행동에 직면해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는 추가 긴축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혼란된 상황에서 ‘트로이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IMF, 유럽 중앙은행 — 는 신속하게 국민투표 실시를 철회시키고 선출되지 않은 은행가들이 주도하는 정부를 그리스에 강요했다. 동일한 조처가 이탈리아에서도 반복됐다.

신임 그리스 총리인 루카스 파파데모스는 1990년대 그리스 중앙은행장이었고, 나중에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신임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몬티는 전 유럽경쟁위원회 위원이자 전 골드만 삭스 이사였다. 반발에 직면한 긴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주의가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위기는 악화되고 있다. 11월 중순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나라들로 위기가 번지는 듯이 보이자 유로 채권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다.

유로존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유럽 지배자들이 이 위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벗어난다면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다. 유럽 지배자들은 잔인한 긴축 정책

을 통해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 유럽 지배자들은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또 은행들과 다투고 있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뿐 아니라 아일랜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 나라들이 ‘과도한 복지 지출’을 한 덕분에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유로존 위기는 2007년 발생한 위기와 연관돼 있다.

2006년과 2007년 미국의 주택 시장의 투기 거품이 꺼지고 신용 경색이 닥치면서 시작된 위기(이른바 서브프라임 위기)는 제2차세계대전 종식 후 최초로 세계 산출량이 줄어드는 전 세계 경제 위기로 확장됐다.

문제가 너무 엄청났고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기관 들은 엄청난 구제금융을 받았다. 덕분에 역사상 최대의 국유화 물결이 일었고 부실과 부채는 민간에서 국가로 이전됐다. 2010년에 이르면 위기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의 국가 채무 위기로 번졌다.

## 다음에 벌어질 일은 무엇일까

유로존의 문제는 이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그리스 정부 채권을 다량 보유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중심 나라들의 은행 시스템에 큰 문제다.

2011년 10월 벨기에와 프랑스 합작 은행인 텍시아가 국유화됐다. 그러나 유럽 전역의 주요 은행들이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유럽 연합은 이제 더 많은 돈을 이런 은행들에 투입하는 것을 통해, 즉, ‘구제 금융’을 통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려 한다.

유로존 경제와 은행들이 주저앉는 것을 막는 것 외에 유로존 지배자들은 유로존의 장기적 미래에 관한 훨씬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독일 경제는 유로화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그리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부동산 거품을 뒷받침한 것은 독일의 돈이었다. 따라서 유로존 나라들이 몰락하면 독일에서 은행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이 경쟁력 수준이 서로 다른 나라들로 구성돼 있다는 정치적 문제가 유로존 문제의 해결을 더 힘들게 만

## 유로존 위기의 뿌리와 역사

유로존 위기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2년 단일 시장 출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7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정’과 1999년 유로화 도입이라는 과정을 보면, 두 개의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이동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쉽게 만들어 기업들의 이윤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들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런 조처들은 유로존 경제들이 자국 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유로존 나라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이런 체계적 압박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라들 간 경쟁력 격차를 확대했고 유로존을 중심(독일)과 주변(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

리스)으로 나누었다. 이런 경쟁력 경쟁의 승자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주변 나라들보다 임금 인상을 훨씬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 거의 10년 동안 임금 인상을 억제한 덕분에 독일은 경쟁력을 높였고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주변 나라들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경쟁력

주변의 나라들은 경쟁력이 저하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소비를 통해 내수를 늘려야 했다. 동시에 독일 은행들은 주변 나라들이 독일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줬다. 〈파인넬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이 덕분에 유로존에서 엄청난 자산 거품, 특히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거품 때문에 유럽 주변 나라들은 2007년과 2009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

은 오늘날 국가 채무 위기의 원인이 됐다.

국가는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했고, 부채 상황 비용은 높아졌지만 불황의 여파로 세수는 줄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재정 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

투기꾼들은 그리스를 집중 공격했고, 국채 이자율이 크게 올랐다. 2010년에 그리스는 최초로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 금융’의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비록 2010년에 그리스는 급한 불을 껐지만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위기는 2011년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리스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빚을 갚고 있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에서 가장 큰 은행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백억 유로 상당의 유럽 주변 나라들의(이탈리아 포함) 국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채권들의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들고 있다. 유로존 지배자들은 주변 나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럽 차원의 정책들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들이 몰락하도록 놔둘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속도가 다른 두 개의 유럽’이 좋다고 떠든다. 이런 경우 유로존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도 주변 나라들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은 주변 나라들의 부채를 떠안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독일은 주변 나라들의 경쟁력 강화를 강제하는 강한 규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로존 통합을 더 강화하고 싶어 한다.

### 강한 규율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는 이 구상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려 한다. 그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을 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경제 질서와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유럽이 이제 더 강

력하게 단결하느냐 아니면 분열하느냐를 결정할 기로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의 지배자들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는 유럽이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유럽 성장을 저하는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유로존을 위기에서 구할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유로존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유럽 주변 나라들의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주변 나라들의 적자가 줄어드려면 독일의 흑자가 줄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독일의 행동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주변 나라들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한 경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문제는 독일이다. 독일은 통화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집이 큰 채권국들이 내수

를 늘려서 채무국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자국 영토의 자원을 수호하는 중요한 행위자다. 이 자본이 어디서 활동하든지 말이다. 유럽 지배계급들 사이의 다툼은 유럽연합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들의 연합임을 폭로했다.

그래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론은 유럽연합이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부과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이 영국 금융 부분의 이윤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유럽연합 · 유로존 계획은 유럽 내외에서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호소력이 있었다. 2004년에 중부 유럽과 동유럽 나라들은 너도나도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애썼다. 발칸과 북아프리카 나라들도 가입의 문을 두드렸다. 유럽연합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연대를, 변영의 길을, 민주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 유로존 위기의 진실

12월 9일 유럽정상회담에서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신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IMF를 통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2천억 유로를 지원하고,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7월에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른바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무디스나 S&P(스탠다드앤amp;푸어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협의가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했다.

사실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유로존 채권 발행 계획이나 구제자금, 유럽중앙은행의 지원도 없는” (파이낸셜타임스)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프랑스 대형 은행의 파산 등 유로존의 본격 위기를 부를 시한폭탄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유로존은 단일 화폐로는 가장 큰 시장이므로 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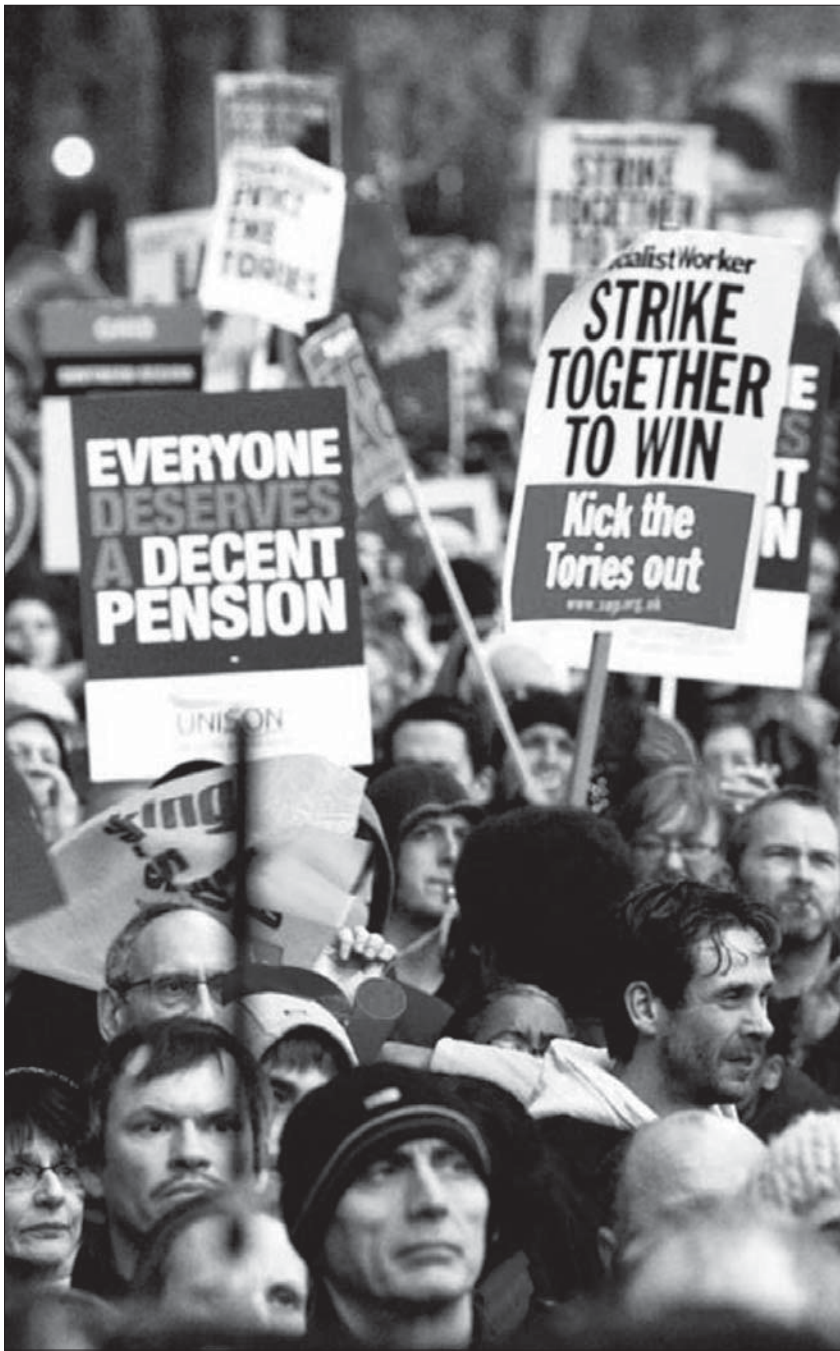
한국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도 “유로존 위기에 따른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유로존 위기 심화로 대우해양조선에 발주한 6천억 원짜리 계약이 취소되고 STX조선이 발주한 1조 5천억 원짜리 선박 제작이 연기되면서, 한 달 사이 대출 연체금이 세 곱 넘게 늘었다.

## 시한폭탄

이미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다. 그리스는 부채상환 시기가 닥칠 때마다 더 극심한 내핍과 민영화를 약속하며 유럽통화연맹·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해 빚을 갚고 있다. 이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29퍼센트로 거의 사제 이자 수준이다. 채권이 부도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가산금리)이 90퍼센트가 넘는다. 즉, 투자자들은 그리스 디폴트의 가능성이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의 경우, 2008년 위기 전 하루 거래량이 59억 유로였지만 현재는



11월 30일 2백50만 명이 참가한 영국 노동자 파업. 이런 투쟁에 유럽의 운명이 달려 있다.

9억 유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본드런’(채권시장 탈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초, 미국 대공황을 심화시킨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처럼 이탈리아·스페인 국채에 대한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이탈리아에 가장 많은 대출이 물려 있는 프랑스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다급해진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2012년에만 7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하며 파장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무디스는 프랑스 최대 은행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아일랜드, 청년 실업률이 40퍼센트가 넘는 스페인도 언제 위기가 폭발할지 모른다.

심지어 독일의 10년물 장기국채도 인기가 없다. 독일도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의 도미노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사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12월 1일 그리스 노동자 파업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복지 지출과 같은 정부지출 축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폐지” 등이 유럽 경제 위기의 시사점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보수 언론들과 1퍼센트 지배자들이 거듭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경총 회장 이희범은 ‘과잉 복지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서 한국이 복지 투쟁에 골몰한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 과잉복지가 문제?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얘기일 뿐이다.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 유럽국가들의 복지 수준은 스웨덴·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에 비교해 더 낮다. 그리스의 임금과 연금 수준은 유럽 최하위다.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 복지 축소와 긴축 정책은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더 강력한 긴축안을 도입할수록 더 불안정이 심해지는 그리스가 그것을 보여 준다.

한편, 장하준 교수는 ‘금융과 부동산 중심의 경제모델’이 진정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금융·부동산 중심의 경제들이 몰락한 데 견줘 독일·스웨덴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경제도 빨리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독일 등 유로존 내 ‘핵심’국 정부와 자본이

자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다른 ‘주변’ 국가들의 적자를 바탕으로 이윤을 보장받아 왔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영국 SOAS대학의 라파비차스 교수는 유로화 도입 이후 ‘핵심’지역, 특히 독일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경쟁력’을 키워 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쟁력’의 차이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불균형이 결국 부메랑이 돼 재정위기를 심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채택했고, 세계 최강 경제 중 하나인 독일 경제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호황은 끝났고, 유럽 주요국 지배자들은 더 강력한 내핍 강요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로’라는 족쇄에 갇혀 긴축 외에 다른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라파비차스 교수는 이제 진정한 논점은 디폴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디폴트를 할 것인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 대중의 이익을 위해, 부채의 ‘질서 있는’ 청산이 아니라 무조건적 청산이 되어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유로화를 탈퇴하고 은행 국유화와 자본 통제를 실시하며 급진적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 족쇄’에 묶여 있다. 협력은커녕 이른바 ‘이웃 공핍화 정책’이라는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유럽을 희생시키는 유로존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신재정연합 건설 제안을 거절해 유럽연합 자체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이탈리아·그리스 총리 퇴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지배자들의 경제적·정치적 무능력은 확실해지고 있다.

끔찍한 경제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 체제는 유럽에서 또다시 경제·정치·사회적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충격 이후 잠시 숨을 고르던 유럽의 청년들과 노동자들, 99퍼센트의 대중은 자본의 탐욕과 경제 위기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에 반대하며, 파업과 광장 점거운동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의 운명은 이런 투쟁에 달려 있다.

최용찬

# 체제의 위기와 체제 변호 경제학의 위기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부르주아 경제학이 오늘날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지난 11월 초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70여 명이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수업을 거부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은 맨큐 교수가 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믿게 하는 경제학만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학생들은 ‘점거하라’ 운동을 지지한다며 동참을 선언했다.

하버드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벌어진 비슷한 때에 미국 선물증개업체인 MF글로벌이 파산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례다. 코자인 MF글로벌 회장은 “지금 유럽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황제에 가깝다”며 EU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는 더 악화했고 그는 파산했다.

이 사례는 1990년대 말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다가 망한 LTCM(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을 연상시킨다. 노벨경제학상

을 받은 경제학자 두 명이 설립한 이 회사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금융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의 아시아 위기와 뒤이어 터진 러시아 국가파산 사태로 몰락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이른바 발행-분배(OTD) 모델\*을 통해 금융시장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위험은 회피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최근 유로존 위기는 이런 금융기법이 사실상 매우 취약한 토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줬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허물었다.

주류 경제학계에는 위기에 직면할 때

**발행-분배모델**  
금융기관이 대출한 다음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위험은 회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금융기법



마다 자조 섞인 한탄이 등장하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30년간의 거시경제학은 잘해 봐야 쓸모 없었고 최악의 경우 유해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사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는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흔히 시장 메커니즘은 가격 신호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신호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논리적으로도 결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칼 폴라니는 시장의 작동은 국가의 힘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자기조정적 시장이란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마르크스도 자본과 시장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 위기로 파산한 금융기관들

이 입은 손실을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내려오는 경제의 개인주의 전통, 즉 부의 증대나 투자 손실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전통과는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도 주류 경제학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인 ‘따로국밥’인 셈이다.

## 대마불사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은 실증과학이 아니라 중세의 신학 같은 이데올로기로 변했다. 현실 경제에는 실업의 고통, 대기업의 수익 급증과 대비되는 서민들의 생활수준 하락, 물가 인상과 실질임금의 정체, 노동자들의 저항 같은 일들이 서로 중첩돼 다채롭게 나타난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은 복잡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델을 세우고 또 많은 변수들을 무시한 채 하나의 추세선을 그리는 계량 분석을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다.

2000년에 프랑스의 경제학 전공 대학

생들이 대학의 경제학 교과과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며 이런 현상을 ‘자폐증적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이런 실패와 모순을 바탕으로 등장했지만 한계가 있다. 케인스 그 자신이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전후 장기호황 때도 실제로는 케인스주의적 처방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침체기에서도 케인스주의적 유효수요 증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도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동학과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내적 모순을 밝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중요하다.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경제 위기가 4년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체제가 왜 이 모양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진 출처: Lorenc Pirozhaki

12월 3일 타흐리르 광장에서 군부에 항의하는 이집트인들

##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집트 장군들

이집트 장군들은 이집트 혁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선거가 진행 중이니 곧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실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란 말이다. 그들은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로 집에 돌아갈 것이고, 파업 노동자들도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최고군사위원회 장군들이 이집트를 좌우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자유 선거였다고 여긴다. 이제 막 1차 선거가 끝났다. 장군들은 무슬림형제단을 승자로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장군들은 새 정부에 축제를 채울 것이다. 장군들은 새 정부가 이집트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군부는 의회와 독립적으로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려 한다.

따라서 아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무슬림형제단조차 군부를 경계한다.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당 지도자 모하메드 모시는 "최고군사평의회는 새 국회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최고군사위원회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이집트인이 장군들을 싫어하며 급진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모시는 최고군사위원회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1차 선거에서 40퍼센트를 얻은 무슬림형제단이 직면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는 장군들이 있다. 장군들은 이집트를 예전과 비슷하게 통치하려 한다. 예전에 최고위장교,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의 연합은 무바라크 정부 뒤에서 힘을 행사했다.

폭력적 경찰 국가를 유지해 주는 대가로 장군들은 온갖 특혜를 누렸고, 이제 그들은 이 특혜를 지키려 한다.

무슬림형제단은 매우 각성한 대중을 상대해야 한다. 사람들은 새 정부가 도입할 것이 확실한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곡물 수입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 있을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식량보조금을 줄인다면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그것은 이번에는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중 운동을 낳을 것이다.

많은 이집트인은 좀더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을 펴 주기를 바라며 무슬림형제단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정작 무슬림형제단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 것이 확실하다.

무슬림형제단은 광범하게 미움을 받는 최고군사위원회의 창조물로 낙인 찍히지 않더라도 이미 충혼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장군들이 순순히 권력을 양도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집트인이 현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1차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52퍼센트만이 표를 던졌다. 유권자 과반이 참가하지 않은 선거구도 많다.

또, 어떤 정치 조직도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현재 카이로는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다. 군이 발표해 40명이 죽은 고장 판로도 되지 않았다.

많은 이집트인은 반격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다.

카이로에서 필립 마블릿

번역 감동욱

출처 영국외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283호

### 세계를 뒤흔든 아랍 혁명

1월 14일, 튀니지 혁명으로 20년 묵은 독재자 벤 알리가 쫓겨났다. 이 혁명은 이집트,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들이 통치하는 아랍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이집트 혁명은 3주 만에 무바라크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다.

리비아와 시리아 지배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벌였지만, 민중은 놀라운 용기와 투지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지켰다. 리비아 혁명은 혁명을 가로채려는 서방의 개입 때문에 왜곡됐지만, 혁명의 진정한 정신은 아직 사라진 게 아니다.

아랍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 혁명은 군부의 반혁명에 맞서 전진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파업과 투쟁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혁명을 중단 없이 발전시키려는 사회주의 자들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아랍 혁명은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줬다. 또, 단지 아랍 세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줬다. "타흐리르처럼 하자"는 구호는 스페인 광장점거 운동에서, 미국 월가 점거 시위에서 울려 퍼졌다.

### 유로존 위기와 노동자 파업

고장 난 자본주의는 2008년 위기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특히 유로존은 붕괴 위기에 빠졌다. 중국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도 금융·재정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위기다.

세계 지배자들의 갈등과 무능력으로 위기는 점차 심화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커다란 반발을 낳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거들해서 총파업을 단행했고, 영국에서는 8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민중은 20년 만에 베를루스코니를 쫓아냈다.

### 99퍼센트의 분노와 '점거하라' 운동

9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월가에서 '1퍼센트에 맞서 99퍼센트,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시작됐다. 이 운동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었다.

월가 점거로 출발한 이 운동은 미국 전역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로 퍼져 나갔고, 오를랜드 노동자 파업을 촉발하기도 했다.

10월 15일과 12월 10일에는 세계 공동행동도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점거하라' 운동은 고장 난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두 차례 시위를 벌였다.



## 국제·국내 10대 이슈

### 이명박의 몰락과 안철수 현상

'네티아·하이힐 부대'의 응징 투표 속에 한나라당은 올해 4월과 10월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심각한 해임덕과 친이·친박의 이기다툼이 계속됐고, 더도스 사태는 결정타가 됐다.

이런 상황의 수혜를 입은 것은 이명박과 타협해 온 민주당이 아니라, 박원순·안철수 등 제3세력이었다.

### 청소 노동자 투쟁 승리

세해 벼두부터 홍대며 당국은 청소 노동자를 대항해고했지만,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겨울 냉공에서 농성하면서 투지를 불태웠다. 결국 49일 만에 승리를 쟁취했다.

이 투쟁의 바통을 받아 고려대·고려대병원·연세대·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고려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점거농성이 벌어졌고, 결국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 투쟁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도 고무했다.

###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6월에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가 떠오른 것은 올해 초부터 여러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고려대, 인하대 등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의 여파였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기만적인 '반값 등록금'을 꺼내든 것이 도화선이 됐다. 때마침 서울대 학생들이 법원화 반대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

'반값 등록금' 시위는 경제 위기 고통선거 속에서 광배해 있던 반이명박 정서를 자극했지만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국회에 대한 압력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 반발 속에서 탄생한 통합진보당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부가 오랫동안 밀어붙여 온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결국 가결되고 말았다. 당권파 지도부는 올해 8월과 9월 두 번의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의 분열과 정체성 훼손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다.

통합진보당은 내년 총선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결합이 낳을 모순과 균열도 예고된다. 좌파는 이 모순에 대한 개입을 준비해야 한다.

정리 최미진

## 서평

## 파노라마 같은 아랍 혁명 심화 과정

지난 2월 이집트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 독재자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반란의 물결이 중동 전역을 휩쓸 때, 서방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이른바 '질서 있는 전환'을 주장했다. 기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수준의 변화만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사태는 그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예언이가 머릿말에서 지적하듯이 아랍 혁명은 '진정'되기에는커녕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 진행돼 왔다. 어떤 곳은 학살로 얼룩지고, 어떤 곳은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는 투지와 용기로 중동의 반란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 이집트에서는 군부의 잔인한 유휘 집압에도 무바라크 퇴진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기성 언론은 앞다퉈 "중동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거나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난다.

"이슬람주의자들이 혁명을 가로챘다"면서 은연중에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곳에서는 급진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암시하기도 한다.

《혁명이 계속되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2》는 기성 언론의 무관심과 의도적 왜곡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친다. 이 책은 지난 2월 무바라크 퇴진 직후 발간된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의 후속편인데, 이미 당시에 엮어내는 머리말에서 "사실, 중동의 반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썼다.



《혁명이 계속되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2》 알렉스 캄라니코스, 사메 나기브 외 지음 | 책방1 | 304쪽 | 1만 2천원

최근 이집트의 유휘 사태는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를 이어 가려 하는 군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1월 혁명 당시 군부를 혁명의 친구로 여겼던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군부의 속셈을 어느 날 갑자기 꿰뚫어 보게 된 것이 아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혁명의 제1막이 끝나고 제2막이라는 더 복잡한 과정에 들어서고부터 이집트 노동자와 민중은 구체적인 유산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파업 물결 속에서, 여전한 체포와 탄압을 받으며, 혁명의 염원을 이루려면 군부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혁명이 심화하는 과정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 준다. "외부 관찰자는 파악하기 힘든 내부의 움직임, 혁명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집트 혁명가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조망하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노동자 파업 물결 속에서 독립 노조를 건설하고, 지역마다 혁명주의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노동자를 자신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장을 창립하고, 군부의 반격에 맞서 혁명을 한 걸음 전진시키고자 투쟁하는 이집트 민중의 움직임은 큰 감동을 준다."(워먼이)

이 책은 이집트 혁명의 전개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이슬람주의자들은 누구이며 왜 부상하고 있는지, 그들은 혁명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감정과 약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 이집트 혁명만이 아니라 리비아, 예멘,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투쟁도 다룬다. 그중 "리비아 혁명은 국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지지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특히, 일각에서 카다피 정권의 성격을 반제국주의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서방의 군사개입도 국내의 좌파 진영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책은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이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 전략에 어떤 차질을 빚게 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 "혁명의 편인 척하면서 혁명을 가로채거나 서서히 죽여가는 미국 오바마 정부 등 주요 열강들의 책략을 파헤친다."

이 책은 주로 이집트 사회주의자들과, 그들과 연대하며 오랫동안 이집트와 중동 문제를 탐구하고 집필한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주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글들이 짧고 설명이 친절해 중동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김태훈



지난번에 99퍼센트가 일어섰을 때

# 1930년대 미국 노동자 파업과 반란

‘점거하라’ 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민중 저항의 역사와 교훈을 돌아본다.

20세기에 들어와 미국에서는 커다란 투쟁이 두 번 있었다.

그중 하나가 1930년대 중반의 연좌파업 물결이다.

이 파업 물결은 1929년 대공황이 회복되는 듯하다 다시 공황에 빠져들기 직전에 벌어졌다.

또한 이 파업 물결은 ‘개혁파’ 정치인을 자처하는 루스벨트의 통치 시기에 벌어졌다. ‘개혁파’에 대한 기대가 투쟁을 소생시켰고 ‘개혁파’에 대한 환상이 투쟁을 종결시켰다.

1929년에 닥친 대공황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처럼 보였다. 그러나 태풍과 홍수와 달리 공황은 저절로 소멸하지 않았다. 되레 공황은 계속 악화됐고 여러 나라로 번졌다.

또 자연 재해와 달리 불황의 타격 뒤에는 적십자 구호물자나 구조대도 없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과 가난을 부끄러운 병처럼 여기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실업자 위원회에 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나 거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분노는 커져이 쌓이고 있었다.

민주당 루스벨트의 대통령 당선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공황기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후버의 공화당 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 당시에 이런 우스개 소리가 돌았다. “미키마우스가 출마해도 공화당에게는 이길 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당선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이 투표를 통해 발현된 것이기도 했다. 루스벨트의 첫 취임 연설은 기대감을 높였다. 그가 사람들을 감동시킨 구호는 구제, 부흥, 개혁이었다. 노동자들은 그런 말에 기대를 걸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쌓아 두었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 분노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34년이었다. 1934년 톨레도의 오토 라이트 자동차 부품공장 파업, 미니애폴리스의 화물트럭 노동자들의 파업, 샌프란시스코의 부두 하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달아 승리를 거둔 것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세 파업 모두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보수적 노조 관료들을 위협했다.

강인한 체구의 광산 노동자 존 L. 루이스가 애틀란타시 AFL(미국노동총동맹)



1937년 미국 GM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공장 라인을 점거하고 44일을 버틴 노동자들은 미국 최강의 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

대표의 얼굴에 라이트 혹은 날렸을 때 미국의 전투적 노동자들은 뭉 듯이 기뻐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좌파 노조인 CIO(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건설됐다.

미국 노동자들은 이후 연좌파업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투쟁 방법을 사용했다. 그전에는 공장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파업의 흔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 연좌파업을 벌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채 파업을 벌인다. 파업에 들어가면 멈춰진 라인에 앉아 농성에 들어간다. 공장을 지키고 파업을 사수한다. 공장은 강철 같은 요새가 된다.

1936년 고무 노동자들은 영하 9도의 추

위 속에서도 장장 11마일의 피켓 행렬을 일구어냈다. 1937년 봄에만 약 40만 명의 노동자가 4백77회의 연좌파업을 벌였다.

## “빌어먹을 공장, 점거해 버려”

연좌파업의 절정은 GM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당시까지 GM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김새만 있으면 사실 용역 강패를 동원에 철저히 분쇄하는 데 성공해 왔다. GM 공장이 있는 모든 시의 관료와 경찰, 언론은 항상 GM의 손아귀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자신감을 회복한 노동자들은 이제 더는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점

거하자, 점거하자, 빌어먹을 공장 점거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GM의 플린트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일단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자들은 멈춘 라인 위에서 잠을 잤고 규찰대를 조직하고 강철 같은 규율을 지켜냈다.

사장들은 거품을 물었다. 한 하원 의원은 “파업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 총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날라 주던 부인들을 경찰이 습격했다. 경찰의 발포로 14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파업은 GM의 다른 공장으로도 확대됐다. 농성자들을 지지하는 연대 행렬이 플린트

공장 밖을 에워쌌다.

GM 사장과 플린트 시장은 군대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강력한 파업 물결이 만든 두려움에 질려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파업의 후반기에는 15만 GM 노동자 중 14만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렇게 44일을 버틴 노동자들은 드디어 미국 최강의 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 승리는 미국 노동자 운동 역사상 최고의 성과였다. 이어서 철강산업 같은 중공업부터 식당 노동자들까지 파업이 줄을 이뤘다. CIO 조합원 수는 1백만 명에서 4백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뒤편에서 노조 관료주의도 같이 성장하고 있었다. 노조 관료기구들은 더 비대해졌고 더 위계적으로 구성됐다.

CIO 지도부는 민주당과 루스벨트를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뉴딜 정부의 관리들과 손을 잡고 협상에 매달렸다.

루스벨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친 CIO 경향의 노조 관료들과 동맹을 공고히 했다.

CIO의 위원장이 된 존 루이스는 1937년 3월에 GM의 승리를 재현하려던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의 시도를 유산시켰고 디트로이트 총파업을 좌절시켰다.

1937년 여름에 미국에 다시 강력한 공황이 닥쳤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파산했고 민주당은 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공격했다. 뉴딜 정부에 종속된 CIO는 힘이 계속 약화됐다.

그럼에도 공산당의 협조가 없었다면 루스벨트의 시도가 그렇게 쉽게 성공하진 못했을 것이다.

공산당은 1934~1937년 투쟁을 주도한 일등공신이지만 인민전선(계급협력)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미국판 ‘인민전선’은 공산당이 민주당과 루스벨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당은 CIO 지도자들과 함께 루스벨트 찬양에 앞장섰다.

공산당은 독자적 노동자 정당 건설 요구도 거둬들이고 1938년에 이르러서는 당의 공장 세포와 공장 신문들을 없앴다. 마침내 공산당은 1944년에 와서는 아예당을 공식 해산했다.

그렇게 해 미국에 대중적 노동계급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사라지고 말았다.

조성민

‘점거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 전 세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99퍼센트의 저항

12월 10일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국제 공동 행동이 전 세계 24개국 1백2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5백여 명이 참가한 2차 국제 행동의 날이 열렸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공장 점거 시위대를 철거하면서 미국의 점거 시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인 10월 15일 1차 국제 공동 행동에 이어서 다시 열린 2차 국제 공동 행동은 ‘점거하라’ 운동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등 25개 도시에서 ‘사람이 아닌 은행을 압류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압류된 주택을 점거하자는 운동



12월 12일 미국 서해안 항구 폐쇄에 참가한 오�클랜드 시위대

을 벌이고 나섰고, 학비 인상과 대학 사유화에 반대하는 대학 점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오�클랜드 ‘점거하라’ 운동이 제안한 12월 12일 미국 서해안 항구 폐쇄 행동에는 미국 서해안의 주요 도시인 LA, 샌디에고, 포트랜드, 타코마와 시애틀이 참가했다.

월가 점거 운동이 외친 “때를 만난 사상을 쫓아낼 수 없다”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점거하라’ 운동은 사그라들기는 커녕 전 세계 99퍼센트의 마음과 생각을 점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에 영감을 준 아랍 혁명과 유럽의 긴축 반대 운동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11월 30일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맞서 2백50만 명이 참가한 영국 공공부문 파업은 1926년 파업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12월 1일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바뀌었지만 효과 없는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올 들어 여섯 번째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탈리아에서도 신임 몬티 정부가 연금 삭감, 간접세 인상 등 대규모 긴축을 밀어붙이자, 12일부터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에서는 군부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리비아 혁명의 진원지인 벤가지에서는 과도정부 퇴진과 카다피 정권 관련 인사들의 처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점거하라’ 운동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저항의 확산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99퍼센트에게 전가하려는 1퍼센트 지배자들에 맞서는 운동, 그리고 경제 위

기를 낳은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이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급진좌파는 ‘점거하라’와 같은 국제주의적 반자본주의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형태를 고스란히 옮겨오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과 저항 정신을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만 한미FTA 추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물가폭등, 전세대란, 공공요금 인상, 실업률 폭등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지배자들에 맞서 현실을 바꿔 낼 수 있다.

강동훈



# 러시아에서도 시작된 99퍼센트의 저항

12월 10일 최소한 8만 명이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 전에도 모스크바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는 수백 명을 연행하고 연행자들에게 최고 15일의 구금을 선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대통령이 됐다. 그의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관리민주주의’였다. 그는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의 힘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야당 활동을 억눌렀다.

법으로 정해진 두 차례 임기를 마친 후 푸틴은 꼭두각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총리가 됐다. 그러나 푸틴이 여전히 진정한 권력자였다. 2012년 3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푸틴은 대통령으로 복귀해 다시 두 차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오만한 생각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푸틴이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크레믈린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볼로트나야 광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수천 명이 추위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투경찰 수천 명과 대치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야당 인사들의 연설을 들었다. 깃발 수백 개가 나눠졌고, 좌파 정당도 많이 참석했다.

많은 사람은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했다.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집권당을 가리키며 “사기꾼과 도둑들의 정당 물러나라”고 외쳤다.



사진 출처 Yuri Timofeyev

“사기꾼과 도둑들이, 이 선거는 무효다!” 12월 11일 볼로트나야 광장 앞 다리를 점거한 시위대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며, 푸틴의 권위주의도 거부하고 있다.

모스크바 학생인 미하일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위에 지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소망을 잘 표현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전 시위에도 참석했던 그레고리는 “변화의 분위기”를 느끼려 시위에 다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서 옥의 티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참가였다.

시위 도중에 극우 민족주의 활동가 두 명이 다른 사람이 동성에 권익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제지하고 “시비걸지 말라”

고 소리쳤다.

극우 지도자가 ‘새로운 러시아 민족 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하자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정치를 논의한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사인 NTV의 한 뉴

스 앵커는 이번 시위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선동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벤 닐 모스크바 현지에서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283호

번역 김용욱

## 시리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반격에 나서다

12월 11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아사드 정권의 학살에 몰리던 시리아 항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시리아 남부의 다라 주에서 파업 참가율이 높았다. 다라에서는 반정부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져 왔다.

반란의 중심지인 홈스에서는 상점과 시장들이 문을 닫았다.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아직 충성하는 병사들은 강제로 상점 문을 열려 했지만 사람들은 인간방패를 형성하고 이를 막았다.

사람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하면서 쇼핑가들은 텅 비었다. 홈스의 보안군들은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을 약탈했다.

교사들이 파업하면서 홈스 학교들도 문을 닫았다. 운수 노동자들을 포함해 다른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은 시리아 혁명 운동 진영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호소한 것이다.

활동가들은 대학, 대중 교통, 주요 고속도로와 관공서의 운영을 막아 잔인한 정권에 일격을 날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군들은 시리아 최대 도시 알레포의 한 공장을 방화했다. 그곳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지역협력 위원회들이 기층 혁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위원회들의 보고를 보면, 학생과 강사

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하면서 다마스쿠스 대학이 휴교에 들어갔다. 위원회들은 또한 이브타와 다라에서 청년들이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고 보도했다.

### 인간 방패

반정부 투쟁 세력들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있다.

시리아국민위원회 소속인 사미르 나샤르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파업은 아랍 나라들과 국제 사회에 시리아 정부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리아국민위원회의 일부는 지배계급

내 친정권 인사들과 타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강력한 파업은 운동이 그 자체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파업 외에도 이탈한 사병과 장교들이 반란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다.

병사들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정부 검문소를 습격한다.

갈수록 많은 병사들이 정부군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잔인한 학살을 감행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려 한다. 정부군은 홈스 주변에 60여 개의 검문소를 설치했다. 혁명가들은 정부가 도시를 봉쇄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시리아 이웃 나라 정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요르단은 시리아와 외교·무역에서 밀접한 관계다.

요르단 지배자들은 시리아를 비판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시리아의 반란이 요르단으로 확산될까 봐 두려워한다.

시리아 혁명에서 파업과 시민불복종이 전술로 활용되면서 혁명이 전진하고 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본 것처럼, 조직 노동자와 파업은 독재자를 제거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선 러덕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283호

번역 김용욱

## 발전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최근 중국에서 노동자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14일에는 중국 내 펄스볼라 공장 다섯 곳에서 공장 매각에 항의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며칠 뒤 17일 광둥성의 동관에서는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파업을 강제로 종식시키려는 관리자·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11월 28일 장쑤성 타이창의 일본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일본인 관리자의 욕설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관리자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또, 중국 최대 수출 공업단지인 선전에서는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는 싱가포르 전자 제품 업체의 노동자들이 열흘 가까이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진정한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같은 곳의 히타치 공장 노동자 2천 명은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공장 매각 조건에 항의하며 파업

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파업은 수출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 노동 운동 지원 단체인 ‘차이나레이버 불리턴’의 제프리 크로설은 “지난 몇 주는 2010년 여름 이후 중국 노동자 투쟁이 가장 뜨거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2010년 여름 Honda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전국 주요 산업 지역에서 파업 물결을 일으켰고 노동자들은 평균 30퍼센트 이상의 임금인상을 따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이 경기 부양 정책이 낳은 호황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벌인 투쟁이었다

면, 지금은 맥락이 다르다.

유럽 경제 위기 등으로 수출이 줄고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장들은 공장 매각, 잔업 수당과 임금 축소 등 노동자들의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 노동자들은 더는 이런 공격을 감내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세계경제 위기가 더 심화한다면 계급 투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은 ‘중국의 기적’에서 소외된 중국 민중의 분노가 갈수록 투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걱정한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도 국내 경제에서 소

비가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꾸준히 줄었다.

또, 공산당 관료들은 노동자들에게 약간 양보하기도 했지만, 일당 독재 체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번에도 경찰들은 히타치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임산부까지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다른 나라 지배자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중국에는 심각한 모순이 산적해 있다. 유럽발 경제 충격의 가능성과 점점 투쟁 경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들을 볼 때 중국 지배자들로서는 이제 위기가 시작됐을 뿐이다.

김용욱



1970년대 말 폴란드인민공화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시달렸다. 국민총생산은 1979년에 2퍼센트, 1980년에 8퍼센트, 1981년에는 15~20퍼센트가 하락했다. 불평등이 커졌다. 주택 부족과 식량 공급은 언제나 원성의 대상이었고, 정부에는 부패가 만연했다.

1980년 7월 1일 정부가 앞으로 질 좋은 고기들은 ‘가격 자유화’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하자 쌓여던 불만이 폭발했다. 폴란드 산업의 대부분이 파업 물결에 휩싸였고, 이 물결은 8월 중순 그단스크-그디니아, 슈체친 같은 해안 도시들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파업 운동을 조율하는 중심은 없었다. 그러나 ‘반체제인사들’로 구성된 한 그룹, 즉 ‘노동자방어위원회’(KOR)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KOR은 주요 산업 중심지의 소규모 노동계급 활동가 서클들과 함께 소식지(〈노동자〉, 〈연안노동자〉 등)를 제작·배포했다.

8월에 그단스크 〈연안노동자〉그룹의 회원인 여성 노동자 안나 발렌티노비치가 레닌 조선소에서 해고되자 이 그룹 회원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손으로 쓴 유인물과 포스터를 조선소와 다른 몇몇 작업장들로 몰래 반입했고, 파업을 촉구했다. 대중 집회가 열렸고 조선소 관리자와 논쟁이 벌어졌다. 같은 그룹 회원이자 역시 조선소 해고자인 레흐 바웬사는 관리자 옆으로 뛰어올라 군중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점거파업이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파업은 인근의 다른 작업장들로 빠르게 확산됐고(역시 〈연안노동자〉 그룹 회원들이 주도적 구실을 했다), 이런 작업장의 대표자들은 레닌 조선소로 결집했다.

며칠 만에 조선소 노동자들의 즉각적 요구들(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 두 해고 노동자의 복직 등)이 수용됐다. 바웬사는 점거 종료를 발표했고, 사태는 이대로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레닌 조선소와 연대하고자 파업에 돌입했던 다른 노동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연대 파업에 참가했던 한 시가전차 운전사가 화를 내며 바웬사를 찾아왔고 다른 모든 작업장이 성과를 얻을 때까지 조선소 노동자들도 파업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바웬사는 바로 동의했고 점거가 재개됐다.

### MKS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이었다. 곧 새로운 기구, 즉 ‘기업연계파업위원회’(MKS)가 세워졌고, 이 기구에는 지역의 파업 작업장에서 파견된 모든 대표들이 참가했다.

MKS는 ‘21개 조항’이라는 더 발전된 요구안을 작성했는데, 이 요구안은 새로운 독립적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를 맨 위에 올려놓았고, 나아가 검열의 완화, 교회의 새로운 권리들, 정치수 석방,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단스크의 새로운 조직과 요구안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정권은 그단스크와 슈체친의 MKS와 조선소에서 공개 협상을 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8월 31일 그단스크에서 정부 각료들은 ‘21개 조항’을 수용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조인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운동은 거대한 작업장 점거 물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모든 파업 작업장들이 그 지역 MKS에 대표자를 파견했다. 대표자들은 집행위원회를 선출해 직접 통제했다. 정부와의 주요 협상들은 노동자 수천 명이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선소 방송 시스템과 연결된 마이크 앞에서 진행됐다.

그단스크 MKS는 만들어진 지 며칠 만에 그 지역의 필수 서비스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디니아 항구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들이 일종의 프



##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 30주년

#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보여 주다

30년 전 12월, 폴란드 총리 야루젤스키는 무려 16개월 동안 폴란드 사회를 뒤흔든 연대노조 운동을 불법화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비록 쓰라린 패배로 끝났지만 이 위대한 운동은 폴란드를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이 모종의 사회주의라는 거짓 주장을 통렬히 반박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 국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대노조 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며 교훈을 살펴본다.

톨레타리아 재판에 회부됐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폴란드 노동자들은 경험을 통해 1905년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채택했던 조직 형태, 즉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다시 창안해냈다. 사실상 초기 단계의 ‘이원권력’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이 민주적 노동자 국가의 맹아는 혁명적 대중 권력 기관으로 발전해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될 잠재력이 있었다. MKS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이런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1980년 폴란드에는 그러한 통찰을 제기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었다. 도리어 MKS는 그러한 염원을 의식적으로 제한했다.

### 이원권력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미 그단스크 파업 때부터 지식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MKS 지도부 주위에 포진했는데, 그들은 주로 요구 수준을 낮추고 타협할 것을 종용했다. 보수적인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도 비슷한 구실을 했고 주요 고비마다 자제하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노조 활동가들 자신도 자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예를 들어, ‘21개 조항’ 합의 문에는 ‘공산당의 지도적 구실’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단스크 합의 3주 뒤에, 여러 MKS에서 온 대표자들이 최초로 전국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새로운 노조 창설을 결의했고, 이를 ‘연대노조’(NSZZ)라고 불렀다. 늦가을이 되자 가입 조합원 수는 1천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폴란드 노동자의 약 80퍼센트에 해당했다.

연대 의식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각

이 새롭게 강화됐다. 대중의 요구와 참여한 지역적·전국적 투쟁들이 더욱 세도했다. 8월 이후 일곱 달 동안 연대노조의 물결은 계속 고양됐고, 학생과 농민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연대노조’를 본뜬 자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누구나 연대노조가 사태를 이끌기를 바랐다. 그러나 권력 장악 의지가 없는 운동(과 지도부)에게 이것은 딜레마였다. 노조 지도자들은 공산당과 국가의 지배라는 근본 질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대체로 운동이 더 치고 나가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연대노조를 단순히 노조로 규정하는 것이 더는 운동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의 맹아이자 토대로서 낡은 질서의 수호자인 국가 기구와 정권대결을 준비해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 비드고슈치

1981년 3월, 농민조합, 즉 ‘농촌연대’ 합법화 요구를 지지하며 관공서를 점거한 비드고슈치 연대노조 조합원들이 경찰 2백여 명의 습격을 받아 조직적으로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연대노조를 상대로 노골적인 폭력이 사용된 첫 사례였다. 비드고슈치 시 전역에서 즉

각 50만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3월 23일 개최된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전국적 행동을 요구하는 기층의 압력이 회의를 압도했다. 회의는 3월 27일 네 시간 총파업을 벌이고 노조의 요구(책임자 처벌, 농촌연대 인정, 정치수 석방 등)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 시간 총파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분위기는 침예했고, 양측 모두 결정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대공장에 파업 본부가 설치돼 바리케이드들로 요새화됐다.

공산당 정치국의 다수는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투입해 파업을 분쇄하자고 제안했지만 총리 야루젤스키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다. 대신에 그는 교활한 수를 썼다. 그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추기경은 레흐 바웬사와 한 시간가량 비밀 회동을 해 직접 압력을 가했다. 바웬사는 다른 노조 지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정부와 비밀 협상을 벌였고, 마지막 순간 TV에 나와 파업 취소를 발표했다.

총파업의 돌연한 취소로 현장 조합원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그 뒤 석 달 동안 파업이 없었고, 노조 회합에 나오는 인원도 줄었다.

### 쿠데타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1981년 봄과 여름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생활수준이 악화하자 노동계급 투쟁의 새로운 분출(주로 ‘비공인 파업’)이 촉발됐다.

그러나 연대노조 지도부의 반응은 싸늘했고, 때로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연대노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된다고 정부가 비난하자, 지도부는 두 달 동안 파업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온건파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조직적 분파로서 분명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대안 전략을 세우지도 못했다.

11월 중순이 되자 파업 물결이 잦아들었다. 조합원들은 점차 지쳤고, 실망감 속에서 노조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권은 공공연하게 노조의 반격태세를 시험했다. 소규모 군부대들이 시골과 소도시들로 파견됐다. 11월에는 비슷한 부대들이 공장들에 파견됐다.

12월 2일 진압경찰(ZOMO) 수백 명이 바르샤바 소방학교 — 연대노조 가입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 로 쳐들어왔다.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12월 12일 연대노조 전국위원회가 그단스크에서 열렸고, 분위기는 비드고슈치 사태 이후 가장 급진적이었다. 대표자들은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때늦은 좌전회였다. 정권이 선수를 쳤다. 그날 밤 전국위원회 참가자들이 호텔에서 자는 동안 진압경찰이 들이닥쳤다. 폴란드 전역에서 연대노조 활동가 수천 명이 자다가 체포됐다.

13일 아침 6시 야루젤스키는 군사 쿠데타를 선언하며 연대노조의 활동을 불허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글렘프 추기경은 방송에 나와 국민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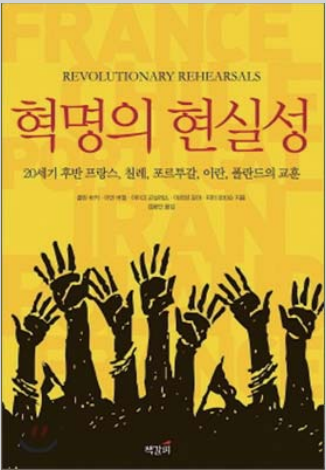
노동자들의 저항(2백여 건의 파업과 점거)이 있었지만 불균등하고 산발적이었다. 며칠 뒤, 이런 저항들은 경찰과 군대에게 폭력적으로 분쇄됐다.

최근의 경제 위기에서도 노동자 저항과 반란은 성장하고 있다. 30년 전 폴란드에서 벌어진 투쟁이 앞으로 재연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30년 전 폴란드 노동자들의 교훈은 그런 반란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돼야 한다.

김용민

김용민은 21세기 후반 프랑스, 칠레, 포르투갈, 이란, 폴란드에서 일어난 혁명의 격변을 다룬 《혁명의 현실성》(콜린 바커 외 지음, 책갈피)의 번역자이다.

### 추천 책



《혁명의 현실성》콜린 바커 외 지음, 책갈피



2012 총학생회 선거 평가

# 급진화의 수준과 진보의 과제를 보여 주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NL계열이 여러 곳에서 낙선하고, 오랜만에 옛 PD계열 좌파들이 성장했다.

NL계열은 2008년 촛불 운동 이후 급진화의 수혜를 입어 지난 몇 년간 성장해 왔다. 올해 서울지역에서 확인한 26개 총학생회 중에 13곳이 NL계열이거나 NL과 친화적인 학생들이 운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5곳으로 줄게 됐다.

그에 비해 PD계열은 이화여대에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추진위원회(사노위) 경향이, 서강대는 대학생 사람연대 경향이 새롭게 당선됐다. 동국대는 진보 연합 선본이 당선했는데 학생회장은 사노위 경향이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NL계열의 낙선을 부각하며 진보적인 총학생회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물론 올해 서울지역의 26개 총학생회 중 운동권 총학생회는 15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그러나 비운동권 총학생회도 11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올해 선거가 파행되거나 투표율이 미달해 내년 3월 선거를 치르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기성 언론은 선거 파행을 두고 “기존 정치판과 다를 게 없다”며 흡집 내지만 많은 경우는 비운동권 경향이 운동권 총학생회의 등장을 견제하며 벌인 일이다. 성신여대는 학교의 탄압 때문에, 국민대는 비운동권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선거를 진행해서, 숭실대는 비권의 부정투표 때문에 선거가 파행됐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경기대, 경기도의 단국대, 부산의 동아대 등 비운동권에서 운동권으로 바뀐 곳도 있다.

NL계열 중에서도 특히 올해 한대련을 주도하는 경향의 학생들이 곳곳에서 낙마했다. 올해 NL 경향은 숙명여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을 운영했지만 숙명여대에서만 재당선했다.

## 정치적 약점

NL계열 총학생회가 지지를 유지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한 실천상의 오류에 있다.

이들은 근래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해서 권력을 잡아야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인민전선 노선을 강조해 왔다.

NL계열은 등록금 문제에도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각종 법, 제도를 개정하는데 강조점을 뒀다. 물론 투쟁을 건설했지만 투쟁의 수준은 야당에 압력 넣기 수준으로 제한되곤 했다.

올해 상반기 여러 학교에서 수천 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총회에 참가하며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NL계열 활동가들도 총회가 성사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대다수 NL계열 총학생회들은 학내 등록금 투쟁을 점거 농성 등으로 발전시키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



6월 1일 반값 등록금 시위 한대련 지도부는 투쟁을 성장시켜야 할 때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투쟁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다.

올해 선거 결과는 인민전선을 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NL계열의 정치와 실천이 어떤 약점을 드러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혁적 좌파가 올바른 정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며 투쟁을 전진시키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았다. 등록금 투쟁은 일부 학교 말고는 더 위력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큰 성과 없이 끝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가 성사돼 점거 투쟁을 결정했지만, 점거

를 반대한 비운동권 학생회를 추수하며 점거를 정리하는 구실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학생총회 성사 이후 좌파 활동가들의 점거 농성 주장에 반대하며 투쟁의 감을 뺐다.

올해 6월 벌어진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대련 지도부는 투쟁이 성장할 때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의제와 기구를 확대해 투쟁을 더 심화·발전시키자는 다함계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투쟁은 결국 더 성장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한대련 지도부는 학내 투쟁이 필요할 때는 ‘대정부 투쟁이 중요하다’며 투쟁을 회피했지만, ‘대정부 투쟁’도 민주당과 동맹해서 의회에 기대거나, 선거 심판하는 것으로 협소화시켰다.

학생 운동을 학생회 대의 기구로 환원하는 관점도 투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 데 발목을 잡았다. 학생회 대의 기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운동권 학생회들의 압력을 받아투쟁 수위를 낮추는 일이 벌어졌다.

고려대는 학생 총회에서 결정한 점거 투쟁을 중앙운영위원회가 폐기시켰다.



3월 31일 고려대 학생총회 이렇게 표현된 학생들의 열망을 제대로 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애초에 점거투쟁을 반대한 비운동권 학생회장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 99퍼센트의 역습

물론 학생 대의기구를 몰신화하는 태도는 NL경향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를 운영했던 전국학생행진 경향도 비슷한 한계를 보였다. 서울대 본부 점거를 실제로 유지하던 학생 중 다수는 점거를 유지하길 원했다. 그러나 점거에 열의 있게 참가하지 않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결정해 점거를 풀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회 활동가 다수가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투쟁을 제한하며, 학교와 타협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투쟁하려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학생행진 경향은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올해 NL계열 총학생회가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생긴 공백의 일부분을 옛 PD계열 학생회들이 매웠다. 서강대에서 당선한 대학생 사람연대 계열 학생들은 올해 희망버스 운동을 열의있게 건설하며 성장한 듯하다.

동국대 진보 연합 학생회는 학내에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건설해 왔고, 당선한 직후 학과 구조조정에 맞서 총장실 점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화여대 사노위 활동가들은 올해 학내 투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고려대, 연세대, 명지대에서는 그 반사이익이 비운동권 학생회에게 돌아갔다. 최근 청년·학생 들의 급진화 수준이 안철수·박원순 지지 정도에 이른 상황에

서 자유주의적인 비운동권 학생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

고려대에서 다함계 경향의 “99%의 역습” 선본은 선명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름 의미있는 득표(14퍼센트)를 했지만 아쉬움도 있다. “99%의 역습” 선본의 학생들은 올해 교육투쟁에서 점거 투쟁을 벌이자고 주장하며 투쟁을 전진시키려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렇게 상반기 교육투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99%의 역습’ 정후보가 학생회장이었던 문과대에서 하반기 문과대 독자 요구를 위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도 ‘99%의 역습’ 선본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대안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친 듯하다. 〈동아일보〉의 반 다함계 마녀사냥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올해 고려대 선거에서 선명하게 투쟁을 강조하며 좌파적 학생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급진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원칙있는 조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올해 선거 결과는 인민전선을 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NL계열의 정치와 실천이 어떤 약점을 드러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혁적 좌파가 올바른 정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며 투쟁을 전진시키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레임덕으로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 안팎에서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제17차유엔기후회의

## 기후 재앙 방지 시늉조차 포기한 지배자들

전 세계 정치인들은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시도를 포기했다.

12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현 교토 협정은 내년에 만료된다.

그러나 정상들은 협정이 아니라 ‘로드



유엔기후회의에서 정부들에 항의하는 시위대

맵’에 합의했다. 2015년까지 협정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협정을 발효한다는 것이 이 로드맵의 주된 내용이다.

즉, 앞으로 8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하게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탄소 배출량이 그보다 훨씬 전에 정점에 도달해 감소세로 돌아서야 한다.

더반 회의 이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토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지만 환경을 크게 파괴하는 캐나다 석유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도 곧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 협약의 목표치는 충분히 높지 않았고 빈틈도 많았다. 또, 교토 협약은 전 세계 최대 환경 파괴범들에게는 적용되

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기후 변화가 심각한 위협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려면 자본가들을 통제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후 회의가 환경 보호에 실패하고 대기업들의 이익 보호에만 성공하는 것이다.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관리자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인권위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12월 14일, 모든 요구를 쟁취하며 복직하게 됐다. 투쟁을 시작한 지 1년 반,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 지 1백97일째였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과 감격스런 승리의 소감을 인터뷰했다.

“원직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담은 잠정 합의안에 도장을 찍는 순간, 현대차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최근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되고, 미국 최대 노조인 전미노조가 국제연대 성명서를 내고, 11월 31일에 국제적인 동시 다발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자본이 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버텨 오던 현대차 자본에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번 승리는 무엇보다 제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



12월 14일 투쟁승리 보고대회 그동안 연대한 사람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비정규직으로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절망스러웠거든요.

아산 공장 앞에서 현대차 사측과 싸우다가,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여성가족부의 태도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저의 억울함을 들어줄 것

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농성장을 철거하고 면담 요청을 매번 거절했어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키는 기관일 뿐”이라는 변명에 정말 기가 막혔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고, 형사 고소에서도 가해자에게 벌금형 판정이 나왔죠. 이런 성

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연대했던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권수정 대리인과 그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좌파, 시민·여성 단체, 진보정당 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강추위에도 삭막한 아산 공장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분들이 와서 같이 떨면서 자리를 지켜 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시민들의 연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지지금을 주신 분, 따뜻한 음료를 텐트 머리에 놓고 가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사측은 저를 해고하면서 “봐라, 저렇게 하니까 길바닥에 나앉지 않느냐”고 했죠. 만약 이 싸움을 포기했다면, 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현대차 노조 이경훈 지도부는 오히려 사측과 가해자 편을 들기도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행히 그 속에서도 제 편에 서서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해 주고, 진술서도 써 주고 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은 사실 오래 참아 온 문제였어요. 먹고살아야 하니까 참아야 했죠. 싸우기 시작하면서는 이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투쟁이 널리 알려진 마당에 반드시 이겨야만 다른 누군가가 또 나서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투쟁이 많은 여성들을 위해 성과를 남겼다는 점 때문에 뿌듯해요. 저는 저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해고되면서까지 싸워야 했지만, 그러나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싸운 것이 제 마음에 훨씬 큰 안식을 줬어요.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부당함에 맞섰으면 해요.

인터뷰·정리 소은하

## 여성 노동자, 안녕하세요?

필자인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부지부장**은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기획단에 참여해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1월 29일 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여성노동자 집담회’에 참가한 후기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6일 동안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아시나요?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려도 병원에 정식으로 고용되지 못해 산재 적용도 못 받는 간병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유연근무제 때문에 저임금과 원치 않는 일자리 변경으로 고개 숙인 공무원 노동자도 있습니다.

새벽 첫차에 피곤한 몸을 싣고 일터로 가면 온갖 더러운 것들에 관리소장 도시락까지 싸서 바쳐야 하는 청소 노동자들,

내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 교사들, 철저히 계급을 따지는 학교 현장에서 기죽어 지내는 학교 비정규직, ‘소장이 달라는 대로 몸을 주지 않아’ 해고된 성희롱 피해 노동자, “여자가 무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크레인에 올라 하루 종일 일하는 여성 건설 노동자.

‘집담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자리였습니다.

‘화장실 가까이 일하는 이들이 제일 부럽다’는 건설 노동자의 이야기, 반대로 화장실이 옆에 있어도 갈 수 없어 방광염에 걸리는 보육 교사와 매일 화장실에서 사는 청소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어 우리들은 ‘깁깁깁’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은 설움은 열은 눈물로, 쓸쓸함은 거친 욕으로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노동자, 우리들은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잘릴’ 걱정 없이 충분한 임금을 받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내 권리를 위해 뭉치고 대표할 권리, 성희롱 없이 일할 권리, 육아를 혼자 떠맡지 않을 권리, 낳고 싶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를 권리가 필요합니다.

### 소중한 승리의 경험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늘 당하고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뭉쳐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건설 여성 노동자는 투쟁으로 동일

임금을 쟁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투쟁으로 도시락 접대 등을 요구한 소장을 쫓아냈습니다. 학교 특수보조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투쟁으로 해고를 철회시켰습니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단 교섭·투쟁으로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임금을 쟁취했습니다.

12월 17일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될 수 없는 요구이고 함께 하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이 앞장서 세

상을 바꾸려는 당찬 발걸음에 당신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여성노동자

권리를 말하다

일시: 2011년 12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414호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공동기획단

## 독자토론광장

12월 26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 한미FTA로 무력화될 지방정부 조례

외교통상부는 얼마 전 지자체에 한미 FTA에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외통부는 한미FTA에 반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국제 분쟁에도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일부 변경할 때 FTA 협정에 반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외통부 공문은 한미FTA가 국내법에 우선하고, 공공정책을 파괴할 것이라는 FTA반대 운동의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시장의 황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어할 수 있는 행정부의 규제나 지원조차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

한미FTA와 지방조례 간 불일치 문제는 단지 조항 몇 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1장에 담긴 투자조항이다. 그 중 ‘간접

수용’ 보상은 현재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인데도 한미FTA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될 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한 미국인이 공장(사무실)을 짓겠다고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샀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고 치자. 당연히 그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당분간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는데 이를 간접수용이라 한다. 한미FTA 발효 전이라면 지방정부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이런 정부 조처가 땅주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에 제소될 수 있다.

‘보상과 대우의 최소기준’도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어느 날 한 미국인이 공장(사무실)을 지을 땅을 사기 위해 찾아왔다고 치자. 공무원은 이

미국인 민원인을 대할 때 한국법만이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기준”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결국 투자자가 제소하면 투자자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내법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한미FTA” 앞에 피해대책만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폭풍이 오는 데 우산 하나 들고 나서는 꼴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그나마 ‘한미FTA 대책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이 기구의 목적이 FTA와 충돌하는 조례를 찾아내 개정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한미FTA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박천석 공무원 노동자

## 악질기업 현대의 ‘성공신화’ 보도한 〈한겨레21〉 유감

〈한겨레21〉을 읽는데 장기 투쟁 농성장을 지키는 해고자, ‘점거하라’ 운동, 재개발 철거 반대 등의 기사가 실려 있다.

반면, 특집기사로 ‘성공시대 달리는 현대자동차’라는 기사도 있다. ‘성공신화’를 만든 정몽구의 사진이 중간에 크게 박혀있고, 그 기사 속에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수익성보다는 품질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 생각엔 전자와 후자가 바뀌었는데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대차 CEO였던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 노사문제가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정규직 노조도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희생해야” 한다

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의 싸움은 1년이 넘게 계속됐고, 지난해 겨울 정몽구는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농성장에 용역을 풀어서 노동자들의 머리를 부수고 뼈를 부러뜨리고, 농성장 난방, 식량, 전기를 차단했다.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고, 황인화 동지가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게 몰아붙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누구 때문에 두개골이 함몰됐는가.

나는 지금 〈한겨레21〉을 읽고 있는가, 조중동을 읽고 있는가. 이번 현대차 특집기사는 매우 유감스럽다.

양효영









# “쌍용차에도 희망을 가져와 주세요”

적극적으로 희망텐트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고 있는 권지영 쌍용차 가족대책위 대표(심리치유센터 '와락' 소장)를 인터뷰했다.

쌍용차에서 여러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몇 번째 죽음'이라고 숫자를 매기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말이지, 해고는 삶을 꺾이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을 주고, 가족을 해체하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혼, 가족 간의 생이별, 그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용차 연쇄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사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말라 죽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사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이런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을 재개했습니다. 희망텐트존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뒤로, 쌍용차 심리치유센터 '와락'으로 핫팩, 수면 양말, 장갑, 귀마개, 야광 랜턴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쟁이 벌어지는 공장 앞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트위터에서 소식을 보고 직접 농성장에 오기도 합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2009년 점거파업 때, 우리는 쌍용차를 시작으로 정리해고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진중공업에서 대량해고가 벌어졌습니다.

쌍용차 노동자·가족 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도 타고, 희망열차도 타고, 천리길도 걸어 연대했습니다.

희망버스가 유쾌하고 발랄하게 웃으면서 투쟁하고, 이런 힘으로 들불처럼 연대를 키운 것은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

다. 몇 차래나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 물대포를 맞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정



12월 7일 '희망텐트' 설치에 앞서 열린 위령제·투쟁 선포 결의대회 연대 투쟁으로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

리해고의 폐해가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대가 이제 쌍용차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막 번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 희망텐트존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일부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24일입니다. 희망버스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날 쌍용차로 캠핑을 와 주십시오.

희망버스는 냉정하고 엄숙한 상황에서라도 밤새 춤을 추고 유쾌함을 동력 삼아 투쟁했잖아요. 쌍용차 공장 앞에서도 이런 투쟁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하

## 점화되기 시작한 연대의 열기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텐트' 투쟁이 관심과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12월 7일 농성 돌입 소식은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트위터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12월 13일 열린 '희망텐트' 연대를 위한 준비모임에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부터 노동·정당·학생·여성·인권·종교·학술·보건 등 5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 그리고 '죽음의 공장 쌍용차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를 건설해 보자'고 입을 모았다.

사측은 최근 "기업 이미지 실추" 운운하며 투쟁을 비난했지만, "향후 대규모 인원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찾을"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희망버스 기획단이 쌍용차로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일부에서는 희망버스 기획단의 방향결정이 자발성을 줄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획단은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길 주저하거나, 민주당이나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연루됐길 꺼려 희망버스의 성과를 잇길 주저해선 안 된다.

쌍용차의 고통에 연대하려는 자발적 대중이 행동할 수 있는 집중점을 제공해야 한다.

자발적 대중이 조직된 대오와 결합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점화되기 시작한 연대의 열기를 모으고 확대해야 한다.

조명지

###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희망텐트존 1차 포위의 날

일시: 12월 23일(금) 오후 4시

~ 24일(토) 오전

장소: 평택 쌍용차 공장 앞

김진숙 지도위원

## “간절히 희망을 기다리는 동지들에게 감시다”

이 글은 12월 10일 'Occupy SEOUL' 집회에서 톤 김진숙 지도위원의 연설의 일부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병상에 누워서도 희망버스가 “쌍용차로 향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왔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겨울입니다. 지난 겨울을 크레인 위에서 보낸 저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쌍용차 동지들과 재능 동지들은 천막도 없는 겨울을 거리에서 보냅니다.

이명박 취임식 무렵 투쟁을 시작한 재능 동지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19명의 생명을 잃은 쌍용차 동지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와 우리 조합원들이 희망버스를 간절히 기다린 만큼, 그 동지들도 얼마나 희망버스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송경동 동지와 정진우 동지는 이 추운 겨울 징역을 삽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자본 권력에게 노동자들의 목숨은

파리목숨만도 못하다는 걸 매일매일 시각각 절감한 3백9일이었습니다.

6월 27일 크레인에 전기가 끊기고 용역들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이후, 크레인을 강제 침탈하려는 기도에 맞서 하루종일을 싸웠습니다. '이대로 죽나 보다' 했지만, 희망버스에 의해, 여러분들에 의해 살아 내려왔습니다.

도처에서 자행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죽어 나갈지 모릅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웁시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 냅시다.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 냅시다.

여러분들이 주신 새 생명으로 저도 곧 회복해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www.marx21.or.kr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새로 나왔습니다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1929년 대공황과 그 교훈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의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날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오늘날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위기 이론과 그 비판자들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웅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